G-Welfare Brief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vol.11
2019.12.12.

발행인 : 진석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s://ggwf.gg.go.kr

ISSN 2671-7166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 10대 이슈

요약

□ 2019년은 민선 7기의 온전한 1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실험이 이뤄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한 해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정책목표로 민선 7기가 지난 해 7월 출범하였고, 예산 확대 및 조직 개편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추동

○ 기존의 정책 틀을 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평가는 긍정적

□ 새로운 정책실험 외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대 복지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청년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정책 확산을 위한 후속 검증 과정이 중요

○ 경기도 지역화폐는 '19년 4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 형성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중으로 긍정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다양한 정책 실험 모델 개발 추진

○ 일하는 청년 통장사업은 근로청년의 빈곤층 전락 예방을 목적으로 '16년 5월부터 사업 추진, '19년 1, 2기 참여자 1,500명이 만기 도래하여 1,339명에게 적립금 지급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주거, 보건, 의료가 통합·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며,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필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하여 시군과 복지시설의 역량을 지원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고객인 시군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응력 강화 필요

○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추진 중인 사례관리사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경기도는 자체가이드를 개발 배포하고, 연계협력을 2020년 평가지표에 포함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특광역시에 유리하여 경기도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선정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20년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경기도 여건 고려는 미흡하여 추가 개선 요구가 필요

○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판정조사를 기반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신청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였으나, 인력충원과 부족한 서비스 급여 확충은 시급히 해결할 이슈

○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여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복지기준선 설정을 추진하여 8개 영역별 기준선 및 29개의 전략과제를 제안

○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의 당사자인 경기도의회-집행부-정책전문기관인 복지재단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 12차례 운영

I.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 동향

□ 2019년은 민선 7기의 온전한 1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실험이 이뤄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한 해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정책목표로 민선 7기가 지난 해 7월 출범하였고, 예산 확대 및 조직 개편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추동

– 2019년은 민선 7기의 정책사업을 온전히 1년을 투입하여 추진한 해로, 복지예산이 10조 5,03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9.9%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확대

〈표 1〉 경기도 복지예산 증가추이 (2017~2019)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최종〉		2018년 〈최종〉		2019년 〈3회추경〉		증 감		비 고
		점유비	(A)	점유비	(B)	점유비	(B-A)	점유비	
도 전체예산	220,409	100%	236,919	100%	263,322	100%	26,403	11.1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예산	76,510	34.7	86,419	36.5	105,034	39.9	18,615	21.5	
복지	42,626	19.3	49,190	20.8	59,842	22.7	10,652	21.7	특별회계 포함
보건	3,634	1.6	3,585	1.5	4,649	1.8	1,064	29.7	
여성가족	28,287	12.8	31,300	13.2	37,326	14.2	6,026	19.3	
주거급여	1,963	0.9	2,344	1	3,217	1.2	873	37.2	주택정책과 이관('15~)

주 : 복지분야 예산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사업소 포함), 주거급여(주택정책과)의 예산을 합친 것임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 보고자료(2019.10.24.)

– 복지관련 직제도 기존의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하여 복지와 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

○ 기존의 정책 틀을 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평가는 긍정적

□ 새로운 정책실험 외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대 복지정책을 선정

○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 다양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의 연계 강화 추진

○ 경기도는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만기도래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건의, 그리고 사회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복지기준선 설정 사업을 추진

– 무엇보다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형성의 당사자가 모여 현안 및 대안을 논의하는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폴리시 랩을 시범운영

Ⅱ.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 10대 이슈

1. 청년기본소득 시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미래세대인 청년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19.3.26) 후 4월부터 추진하여 분기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약 12만 명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인을 4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분기)으로 소득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자본 순환"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투자 경제 모델'의 성격도 보유

□ **청년 개인 및 지역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고,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 확산을 위한 후속 검증 과정이 중요**

○ 청년의 생활안정 기여 등 개인단위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1분기 지급만으로도 60.3%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하여 개인 삶 및 사회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

-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전적인 걱정이 줄고(31.0%), 자기계발을 시도할 수 있으며(31.0%), 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기는(12.1%) 등의 개인적 변화 도출
-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69.91점)이 높아졌고,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긍정적(69.29점)으로 변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80.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신청률이 83.5%에 불과하는 등 정책보완이 필요

- 만족 이유는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고(35.2%),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11.3%) 순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미신청자의 비율이 15% 이상이고, 지역화폐 카드 미신청 등의 이유로 기본소득을 수령하지 않은 비율이 5%를 상회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청년기본소득이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대한 성과 검증과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 상승을 위한 연구 등 후속 과정 중요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기본소득 수령 후에도 삶의 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산 유도
- 청년기본소득을 통한 개인 삶의 변화를 주거, 취업, 사회활동 등 유관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후속 연구 추진

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운영

□ **지역경제순환효과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9년 4월부터 지역화폐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 형성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중**

○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으로, 지역의 가치 복원 및 사회적 관계의 연계 기제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민간영역에서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실험은 다수 진행되었으나, 광역단위의 공공영역에서 지역화폐 활용과 효과에 대한 정책 실험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 4,961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여 9월 현재 3,425억 원이 발행되었고, 이 중 2,661억원이 일반한식, 수퍼마켓 등에 사용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아동 수당 등 정책발행에 총 1,359억원이, 일반 발행이 2,066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시군 별로는 성남시가 약 66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발행
- 사용처를 보면 일반한식이 20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퍼마켓 64.2억 원, 서양음식53억 원, 보습학원 48.9억 원, 편의점 39.1억 원 순
-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73.69점)' 및 '지역공동체 함양(69.91점)'에 대한 관심 증가하였다고 응답

○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자원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관 2곳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을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추진 중

-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및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불
-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화폐를 통해 비용 지불
- 시범사업의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지역화폐가 공동체 활동의 촉진과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

□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여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실험 모델 개발**

○ 지역경제에의 영향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전부터 사전·사후 검증을 고려한 정책 실험을 설계

○ 특정 사업의 표준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농촌형, 도시형 등)이나 지역 물적·인적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3. 일하는 청년통장 1, 2기 만기

□ **경기도 내 근로청년의 빈곤층 전락 예방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16년에 시작되었고, '19년에 1기 및 2기 참여자 1,500명이 만기 도래**

○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의 빈곤층 전락 예방과 안정된 미래 준비, 일자리 유지 등을 목적으로 '16년 5월부터 사업 추진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만18세~만34세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부담금, 경기도지원금, 민간후원금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자산형성(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16년 5월 1기 5백명을 시작으로 현재 7기까지 총 20,501명이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1기와 2기에 해당되는 1,500명에게 2019년 만기적립금 지급 중
  - 1기 대상자는 총 500명으로 이 중 436명(87.2%)이 최종 적립금(1,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2기 대상자는 총 1,000명으로 이 중 903명(90.3%)이 최종 적립금을 지급 받을 예정

○ 일하는 청년통장 1기, 2기 참여자의 정책 효과는 경제적 스트레스 완화, 이직의사 감소 및 일자리 유지에 대한 의지 증가 등이 통장사업 참여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도출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1기, 2기 참여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10명 중 8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 되었다'고 응답[1)]

□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의 빈곤예방과 자산형성 등을 위한 토대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적립금 지급 이후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사후 관리 등의 과정 추진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노무 상담, 재무 상담 및 컨설팅, 대상자들의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활 및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들의 자조모임인 '취업의 길', '소통하는 사람들', '20대 신입학개론' 등 다양한 주제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

○ 일하는 청년통장 1기, 2기 이후 대상자의 적립금 활용 용도, 대상자의 생활 및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 유지 등 대상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자산형성 여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변화보다는 대상자의 재무역량 개선에 따른 현재 재무관리 상태의 유지 및 개선 등의 효과가 더 긍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추적조사 등의 관리체계 개발 필요
- 적립금 지급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의 변화 수준 등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환류 체계 구축

1) 경기복지재단(2018). "일하는 청년통장 금융태도실태조사"

4.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기존의 분절적 돌봄서비스의 포괄적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보건, 의료가 통합·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19년 현재 전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가 노인분야에, 화성시가 정신질환자분야에 선정되어 시행 중

○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정책설계가 가능해짐

- 기존 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에서 발굴·사례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전체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케어안내창구의 운영으로 발굴과 선정 창구가 단일화됨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다직종, 다분야의 전문가와 집행부 등이 함께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므로써 의사결정에 포괄적 의견 반영
-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설계는 시·군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반영한 세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중앙정부의 재정과 인력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시군과 미참여 시군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행 필요**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인력 투입으로 전제로 하고 있으나, '19년 국비가 6,393백만원 지원되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에 우선 선정기회가 부여되고 있어 해당 사업 참여 시군과 미참여 시군 간 복지격차를 벌이는 요인으로 작용

○ 경기도에서는 미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 특성을 살린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미선정 지역의 복지격차 감소 도모

- 돌봄 외에 생활기능 훈련+주거서비스+푸드 등 총 4개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된 포괄적 재가서비스로 이용자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역의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지가 있는 시·군을 우선 선정하여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벤치마킹 기회 제공

5.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 출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시범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하여 4월~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 운영

○ 보건복지부는 2019년 4개 지역을 시범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으로 선정하고, 2020년에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총 11개로 확대 예정

○ 4개 시범사업 지역 중 경기도의 모델은 공공센터운영 모델로 시군과 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지원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 5개의 공공센터(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수탁운영을 통해 시군을 지원하는 광역적 기능 수행

○ 시군 위탁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에 마땅한 운영주체가 부재하거나 신규 시설 중심으로 수탁하여 지역 내 갈등 최소화

- 신규 수탁 시설은 화성시 다함께돌봄 1개소, 남양주시·성남시·의정부시·수원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각 1개소씩 모두 6개소 수탁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역인 부천시와 남양주시에 종합재가센터 각 1개소씩 직접 설치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직접 제공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적극적 협력 주체로 활동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시설안전관리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민간지원사업 본격 추진

□ 31개 시군별 / 단위사업별 민간위탁조건에 대한 점검 및 전략기획, 대응력 등을 강화하여 핵심 고객인 시군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 도모

○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인정경력 충족 여부, 정관 상의 목적사업 수록 여부 등 시군별 기준이 상이하여 수탁을 한 개소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시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인력배치

-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지역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수탁한 것은 시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향후 사업량 확대를 위해 시군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노력 필요

○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이라는 위상 보다는 '고객지향적'인 사업 전문성과 인력 운영 기제를 통해 시군 및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

- 종사자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직위와 임금체계가 같은 동질적 시설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설운영의 전문성 축적 시간 단축 도모

6.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

□ **2019년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추진 중인 사례관리사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 가이드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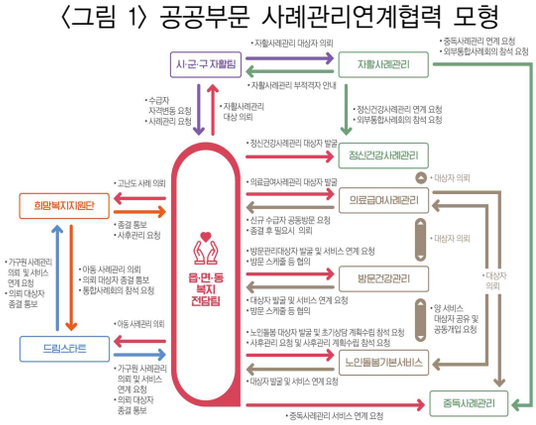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 정신보건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연계 협력은 미진한 상황

- 각 분야마다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사업과정에서 연계협력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연계가 이뤄지지 않음

○ 2019년 1월 8대 영역의 사례관리사업간 연계협력 실천가이드를 배포하고 연계협력 독려 중

- 8대 분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 자활사례관리, 중독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그림 1〉 공공부문 사례관리연계협력 모형



□ **경기도는 공공부문 사례관리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시군별로 공공부문 사례관리연계협력을 위한 가이드 개발과 함께 평가지표에 반영**

○ 경기도 복지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보건건강국의 관련부서들과 네트워킹 회의를 추진해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별로 공공부문 사례관리연계협력 강화를 지원

-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연계협력 실천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각 부서별로 시군에 공공부문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를 독려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아동, 자활, 노인, 정신질환, 각종 중독질환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과 동행방문, 사례회의, 서비스의뢰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

○ 경기도는 공공부문사례관리 연계협력 가이드를 자체 개발해 배포하고,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평가과정에 평가지표로 반영, 실질적인 성과 유도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노인상담센터 등 경기도 자체적인 사례관리기관들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 상반기 31개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업평가 지표에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 협력건수를 지표로 포함

○ 향후 시군에서 이뤄지는 각 분야별 사례관리과정에서 읍면동과의 연계 강화,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의 연계현황, 공공사례관리분야별 협력회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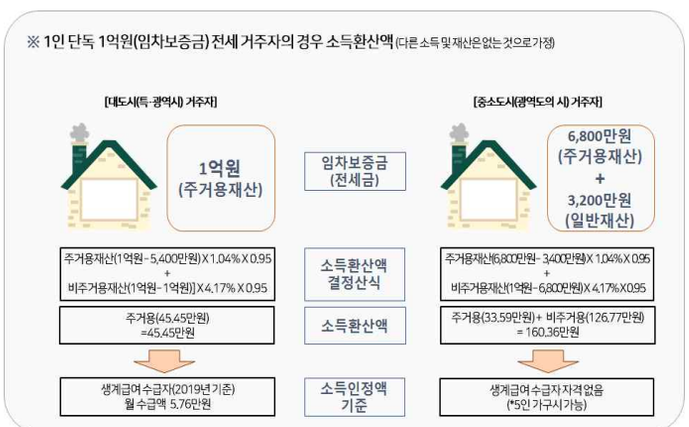
7.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현행 보건복지부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상대적으로 특광역시에 유리하고 지가가 높아 중소도시에 속한 경기도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요구**

○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특·광역시)와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거주자를 비교하였을 때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음

-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지가(地價)보다는 행정계층(특광역시-시-군)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
- 그 결과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기초보장 수급률이 가장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그림 2〉 동일 재산 가치에 대한 소득환산액 비교(예시)



□ **보건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을 인상키로 하였으나 여전히 경기도의 여건 고려는 미흡하여 추가 개선이 필요**

○ 2019년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기본재산액 공제기준과 주거용재산 인정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향후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를 제시

〈표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주거용재산 인정한도액 변화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현행	'20년(예정)	현행	'20년(예정)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1억원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5,200만원

○ 경기도는 국회토론회, 도내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 국회의원 31명 주최 국회토론회(8월), 경기도 내 사회복지단체 간담회(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간담회(11월) 등을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추가적인 고시개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

8.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서비스 신청은 통합신청 방식으로 전환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도록 공공·민간이 연계한 공공사례관리 기능 강화**

○ 기존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재편하고 개별 제공주체들에게 신청했던 것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 및 욕구에 기반한 종합조사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19. 7월부터 일상생활지원,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및 고용지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적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

○ 공적급여가 필요한 종합판정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연계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는 민간영역(장애인전담협의체)에서 지원 및 사례관리 하도록 전환

□ **서비스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인력이나 서비스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표도 모든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서비스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욕구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서비스가 담보되지 못한 상황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개 장애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민간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연계해줄 장애인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추가 배치가 없는 상황

□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장애등급제 폐지 견인**

○ 중앙정부는 장애유형 및 대상자의 급여량를 반영한 좀 더 정밀한 종합조사표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전담팀에 장애인 전문가를 추가 배치

○ 경기도는 맞춤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군-민간 영역 간 전달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욕구에 기반한 명실상부한 장애등급제 폐지 견인

- 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연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시군은 이에 맞춰 '맞춤형 장애인지원팀'을 신설하고, 36개 장애인복지관에 맞춤형지원팀을 설치하여 중위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사례관리 기능을 기 설치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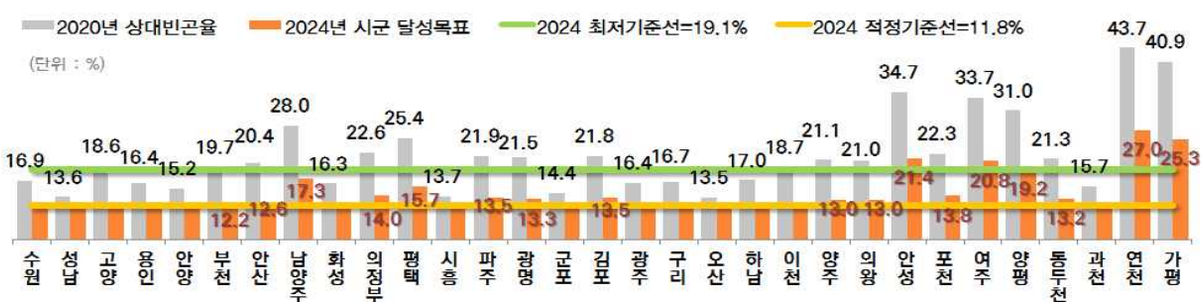
9. 경기도 복지기준선 설정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로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복지기준선 설정」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 경기도민 중 55.3%는 "31개 시군의 복지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며, 주로 생활수준(36.3%), 보건복지인프라(14%), 예산규모(12.6%), 제공되는 보건복지서비스(12.2%) 순[2)]

○ 도민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8개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복지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5년 동안 도달해야 할 적정기준선을 설정

- 소득,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평생교육,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8개 영역별로 도민·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도민정책추진단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 구성
- 각 영역별 해결이 시급한 이슈를 지표로 선정[3)]한 후 관련 지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적정선을 설정
  - 소득영역을 예시해 보면, 도민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체의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고, 상대빈곤율을 지표로 선정
  - 경기도 상대빈곤율 19.1%을 2024년까지 OECD 수준인 11.8%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31개 시군 목표치는 매년 11.3% 감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고-최저간 15%p 격차 완화를 기대



□ **도민이 누려야할 복지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과정 점검 및 격차 개선정도를 파악**

○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역별 전략과제 29개 및 우선추진 시군을 제안하였으며, 매년 기준선 도달 정도와 전략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 예정

○ 점검 내용은 시군에 전달(feed-back)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복지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2)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3) 각 영역별 지표로는 [소득]은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규모, 삶의 질, [일자리]는 고용률, [주거]는 아동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비적정주택 거주비율, [보건의료]는 연령별 예방접종률, 스트레스 관리기관 이용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참여율, [아동돌봄]은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온종일돌봄사업 지원예산, [노인과 장애인돌봄]은 돌봄서비스 이용률, 돌봄서비스 미충족률임

10.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복지정책 실험이 많아지면서 집행부가 혼자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대신 의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운영**

○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혼자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관료 외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실험 설계 및 검증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 필요

- 유럽연합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형성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폴리시 랩(policy lab)이 등장
- 정책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정책실험을 통해 의제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대안개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혁신적 정책도입의 테스트 베드(test bed)역할 수행

○ 복지정책커뮤니티란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정부, 의회, 전문가, 이익집단 등)로 구성된 일종의 공동체

- 복지정책커뮤니티를 통해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대화와 타협을 거치므로 정책의 혼란과 표류를 감소시키고, 정책입안-집행-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가능

□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정부 차원의 최초의 폴리시 랩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후속조치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존재**

○ 과학적인 실험이나 증거에 기반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정책대상자(토론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한 이용자 중심의 폴리시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

-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차례 개최하여 정책 수요자 886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 사업지침 변경, 법 개정 제안 등 다양한 성과 도출

○ 명실상부한 정책커뮤니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커뮤니티의 운영을 지속하여 성공모델을 도출하고[4], 이를 다른 복지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운영모델을 개발

- 정책형성과 집행의 당사자인 집행부(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원하는 주제를 반영하는 노력을 보완
- 논의 결과를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하거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와 연결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점을 정책실험을 통해 찾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

4) 덴마크의 마인드랩은 2002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네덜란드 국세청의 'Future Center'는 13년을 지속함. 유럽에서 폴리시 랩의 평균 운영기간은 약 3년임